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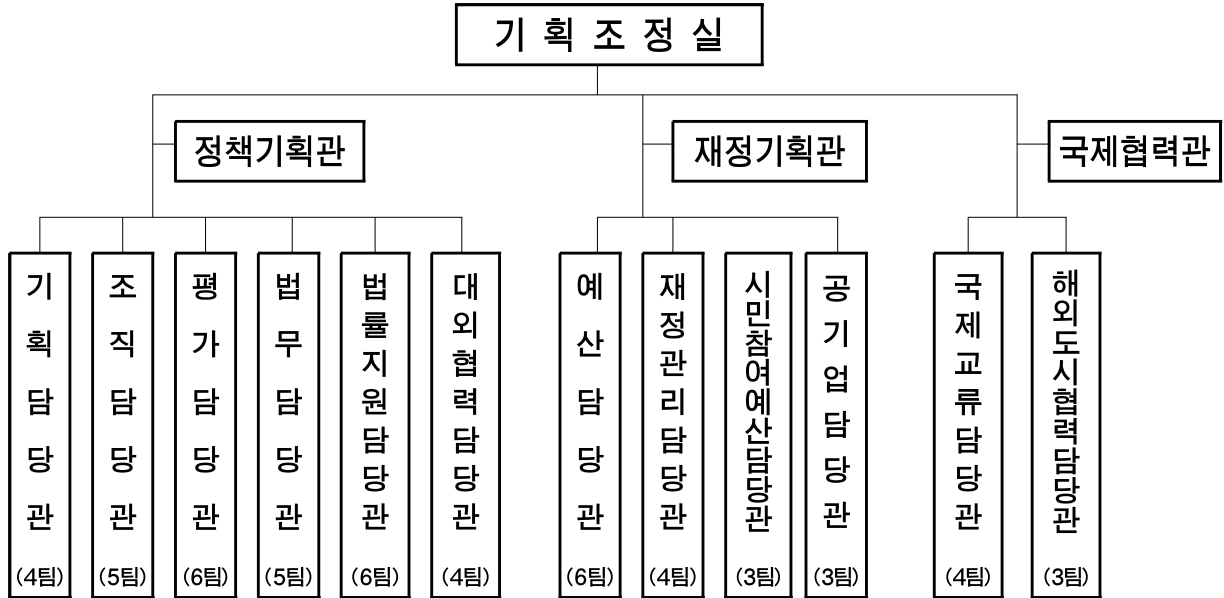
# 주요 업무 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2담당관·과, 53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306/274명(정원/현원)

(’18. 7. 12.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06 / 274 (139)	256 / 229	42 / 35	1 / 1	7 / 8
기 획 담 당 관	33 / 29 (10)	30 / 26	1 / 1		2 / 2
조 직 담 당 관	31 / 30 (16)	29 / 29	1 / 1		1 /
평 가 담 당 관	34 / 30 (17)	32 / 28	1 / 1		1 / 1
법 무 담 당 관	25 / 23 (13)	23 / 21	1 / 1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9 / 28 (17)	14 / 13	15 / 14		/ 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27 / 22 (9)	20 / 19	7 / 2		1
예 산 담 당 관	40 / 35 (13)	39 / 34			1 / 1
재 정 관 리 담 당 관	18 / 17 (9)	17 / 16	1 / 1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9 / 8 (5)	8 / 7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17 / 14 (6)	15 / 12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7 / 26 (15)	17 / 15	8 / 8	1 / 1	1 / 1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16 / 12 (9)	12 / 9	4 / 3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li> <li>○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li> </ul>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li> <li>○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li> </ul>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li> </ul>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li> <li>○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li> </ul>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li> <li>○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li> </ul>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남북 간 교류협력 업무</li> <li>○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li> </ul>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li> <li>○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li> </ul>
재정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li> <li>○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li> </ul>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li> <li>○ 예산학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li> </ul>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li> </ul>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li> <li>○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li> </ul>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li> <li>○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li> </ul>

## 예산 총 규모 : 1조 3,960억원

###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2,438,845 (78)	1,395,971 (78)	△1,042,874
일반회계	927,561 (62)	555,571 (61)	△371,990
도시개발특별회계	26,920 (-)	40,674 (-)	13,754
기금	1,484,364 (16)	799,726 (17)	△684,638

### ○ 일반회계 : 총 5,55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927,561 (61)	555,571 (62)	△371,990
기획담당관	1,035 (3)	1,229 (3)	194
조직담당관	98,699 (10)	85,139 (12)	△13,560
평가담당관	1,727 (7)	2,638 (6)	911
법무담당관	555 (3)	661 (3)	106
법률지원담당관	4,616 (2)	5,824 (2)	1,208
대외협력담당관	3,973 (7)	4,356 (7)	383
예산담당관	186,863 (3)	259,820 (3)	72,957
재정관리담당관	619,345 (6)	183,660 (5)	△435,685
시민참여예산담당관	464 (2)	630 (3)	166
공기업담당관	789 (4)	697 (4)	△92
국제교류담당관	4,051 (7)	5,542 (7)	1,49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444 (7)	5,374 (7)	△70

###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40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26,920 (-)	40,674 (-)	13,754

### ○ 기금 : 총 7,99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484,364 (16)	799,726 (17)	△684,638
재정투융자기금	727,603 (-)	591,495 (-)	△136,108
감채기금	727,463 (-)	183,161 (-)	△544,302
남북교류협력기금	11,345 (1)	10,875 (1)	△470
대외협력기금	12,225 (15)	13,281 (16)	1,056
지역개발기금	5,728 (-)	914 (-)	△4,81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 II. 정책 목표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 선 7 기  
시 정 성 과  
창 출  
지 원

시 민 권 익  
향 상 을  
위 한  
제 도 개 선

실 효 성 있 는  
예 산 · 재 정  
관 리 체 계  
확 립

교 류 협 력 에  
기 반 한  
서울의 위상  
제 고

#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① 시정 주요정책 현안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②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 ③ 시민접점 분야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④ 합리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지원
- 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①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 ③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④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⑤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

##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②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 ③ 투자·출연기관 설립 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 ④ 노동이사제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
- ②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 ③ 정책 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강화

##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① 시정 주요정책 현안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②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③ 시민접점 분야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④ 합리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지원

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 1 시정 주요정책 현안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 추진방향

- 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중장기 시정 마스터 플랜 기획·수립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현안발생 시 회의소집 및 시정자원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체계 구축

## □ 추진내용

- 시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관리
  - 최상위 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방향 제시
  - 공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대시민 공약 실천(메니페스토) 지원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정례간부회의 등) 운영을 통해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부여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

중장기	상 시	긴 급
시정철학 반영 시정운영계획 수립·관리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현안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2

#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4개년간의 서울시정 기본계획을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자문을 받아 수립

### □ 추진방향

-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방향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제시
- 소관 실·본부·국이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관 참여형 계획을 수립해 대외 발표

### □ 계획구성 ※ 더깊은변화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확정

**비 전** :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정책목표** : 미래특별시, 상생특별시, 사람특별시, 안전특별시, 일상특별시, 민주주의특별시

**핵심과제** : 정책환경, 정책방향, 시민체감지표, 사업계획 등

**투자계획** :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핵심과제 및 분야별 투자수요 등

### □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위원회 : 56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그룹, 현장 활동가 등)
- 기획위원회 : 각 분과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 정책목표별 6개로 구성(위원회별 9명 내외)  
※ 미래·도시·사람·안전·일상·민주주의 위원회

### □ 추진계획

- 분과위원회 운영 및 핵심과제 사업계획 수립 : 7.5(목)~8.14(화)
- 기획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개최 : 8.21, 24, 31
- 핵심과제 대시민 발표(예정) : 9.10(월) 예정

### 3 시민접점 분야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수혜 시민이 직접 만족 수준을 평가하고,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 추진방향

- 시 행정의 고객인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
- 외부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추진개요

- 시행근거 :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시민평가)
  - 시장은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상수도, 공공도서관, 공원 등 시민생활 밀접 행정서비스 분야
  - '99년 최초 시행 후 매년 5~10개 분야 선정 실시
- 평가방법 : 전문 여론조사 기관 조사(방문면접·전화·온라인 조사)

#### '18년 추진계획

- 조사대상 : 5개 분야 13,700명

조사분야	표본수	조사대상
일 자리 센터	3,000명	▪ 일자리 센터,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이용 시민
도로 안전	3,000명	▪ 도로 안전 관련 운전자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	3,300명	▪ 자전거 도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시민
주거복지	2,000명	▪ 주거복지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이용 시민
캠핑장	2,400명	▪ 난지캠핑장 등 6개 캠핑장 이용 시민

- 조사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18. 6)
  - 행정서비스 조사대상 분야별 전문가 '설문방법 및 문항'에 대해 자문
- 행정서비스 분야별 시민평가 조사 실시('18. 7~11월)
- 조사결과 시홈페이지 공개 및 정책개선 활용('19. 1월)

## 4 합리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창출 지원

기준인건비, 기구정원 규정 등 통제적 지방조직 관리 환경속에서 시정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관리

### □ 조직관리 운영 방향

- 기구 설치 필요성, 기능 적정성 분석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현안의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적정 수준의 행정기구, 정원산정, 기능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 유사·중복, 행정수요 감소, 성과 미흡, 민간위탁 전환 분야 등

서울시 기구·정원 현황(2018.7.2. 기준)

- 본 청 : 3부시장, 1실 9본부 9국 13관·단 148과·담당관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2직속기관(24개소방서 포함) 46사업소
- 시 의 회 : 1처 1실 5담당관 10전문위원
- 합 의 제 : 2위원회(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조직관리 기본 전제

- 지자체별 기구·정원 운영 기준인 ‘기준인건비’내 조직 운영
  -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행정수요(인구수, 공무원 정원, 사업체 수 등)를 검토하여 연도말 책정·통보
  - 2018년 서울시 기준인건비 1조 7,323억원, 2018년 편성인건비 1조 6,875 억원
-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 시의회 의결로 기구 및 정원관리
  - 3급 이상 기구 설치, 사무분장 추가, 삭제를 위해서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필요
  - 총정원,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시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필요

### □ 추진계획

- 시정 핵심시책 조기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 '18년 8월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 : '18년 11월

## 5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

### □ 지방분권의 필요성

-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사회적 난제(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해결에 한계
- 지역별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선행 필요

### □ 추진방향

-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을 **실생활 사례로 홍보**, 시민 공감대 조성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지방분권 **중점 과제 추진**
- 시·도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로 **지방분권 과제 촉진**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15.4. 제정)
- 소요예산 : 111,500천원 ※ 예산 사업명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 추진실적

- 지방분권 핵심과제별(조직·재정·사무 등) 정책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 광역단위 온전한 자치경찰제·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 市 자치경찰 모델 발표(’18.2.), 「우리시 재정분권 대응전략」 수립(’17.8.~)
- 전국지방분권협의회·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시민공감대 확산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개최(’18.3.), 대학생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토론회(’18.3.)

#### 《 중앙정부 동향 》

- 정부 개헌안 취지를 살려 법령 제·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분권과제 검토 중
- 자치조직권은 「기구정원규정」 일부 개정 검토 중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 합의문 형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 발표(’18.6.21.)
  - 서울·세종·제주에 자치경찰 **시범 도입** 및 대통령 임기 내 전국 도입

## □ 2018년 중점 추진 사항

### ① 민선7기 차질 없는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집중 건의

- 미래 행정수요 대비 조직설계에 필요한 ① 3급이상 기구 설치 자율권 보장, ② 부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한 책임부시장제 도입 중점 건의
- 민선7기 조직개편 일정 감안하여 8월중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 개정 요구

### ② 우리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 도입·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 중립성 확보된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 원칙은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이 수사권 보유,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운영재원 확보  
※ '18.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가칭)자치경찰법 제정 논의 예상, 市 자치경찰팀 신설('18.8월)

### ③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이양 적절성, 행·재정 지원 적극 요구

- 국가사무(514건)의 이양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안, 하반기 운영위 회부 예정  
- 이양 국가사무(514건) : 18개 중앙부처, 100개 법률, 10개 상임위 연계
- 이양 적절성, 이양사무 수행시 소요 예산·인력 등 검토 후 적극 의견 개진('18.7월)  
※ ('18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19년)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 ('20년) 이양 추진

### ④ 불균등한 세입구조(8:2) 개편 및 지방 재정자주권 확대 건의

- 정부안에 국세-지방세 6:4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담기도록 지속 요구
- 지역 간 재정균형 달성 위해 지자체 참여·협의로 재정조정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지방세 확대, 국세·지방세 7:3 개선), 기획재정부(국세이양 최소화)

## □ 추진계획

- 행안부·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市 분권 핵심과제별 법령 개정사항 지속 건의
- 주민자치 주간('18.10.25.~10.31.),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 운영('18.10)

##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①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

③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④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⑤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

---

# 1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민간위탁사업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시정 핵심가치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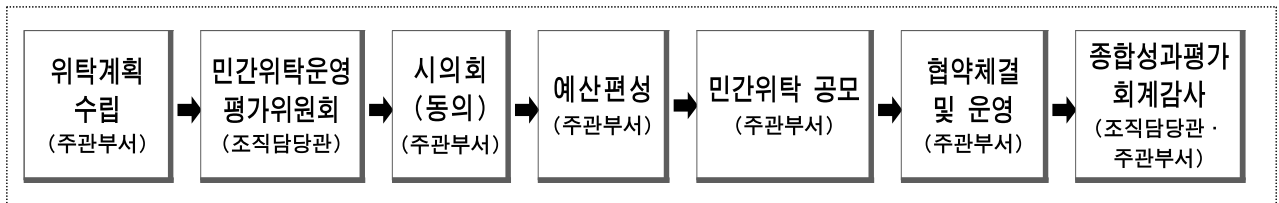
## □ 제도개요

### ○ 개념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행정능률 향상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명목과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위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제도의 운영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3년 이내 위탁운영 원칙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공유재산법상 시설관리 위탁은 5년 이내)
- 민간위탁 신규 공모절차



### ○ 민간위탁 사업현황

(’18.7.1.기준)

계 (건/억원)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84	7,561	357 (93%)	7,516	235 (61%)	5,848	122 (32%)	1,668	27 (7%)	45

### ○ ’18년 민간위탁제도 운영예산 : 706백만원

## □ 추진실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상반기 총 4회, 30건(신규3, 재계약27건) 심의
  -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및 관행적인 재계약 여부 등 심의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구 성 : 10명 (내부 3, 외부전문가 7)
- 운 영 : 연 4회 이상 대면심의

-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위탁하는 것
-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등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11개 사무(4월, 평균 91.94점)
  - 평가대상 :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 없는 연 위탁금 5억이상 사무('18년 48개)
  - 시기/방식 : 위탁 만료일 90일전 (위탁기간 내 1회) / 전문평가기관 평가
  - 결과활용 : 위탁사무 업무개선,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반영(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예산/회계/인사/복무 매뉴얼 개정('18.6.)
  - 근로기준법(주52시간)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의무 명시
  -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시 협약해지 가능토록 표준협약서 개선
- 통합 회계감사 대상(10억미만 → 모든 위탁사무) 단계적 확대
  - '18년 3월, 총 174개 사무 회계감사 실시(위탁금10억원미만 154개+10억이상 20개)
    - ※ 이 외 190개 민간위탁사업은 위탁주관부서별 외부회계감사 실시
  - 통합회계감사 실시 대상사무를 연차별로 단계적 확대 실시 예정

##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18. 7월, 9월
- 제3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9개 사무) : '18.11월



## 2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제도를 개선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

###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법령·제도 등 개선
- 법령·제도개선 사항 중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 □ 추진내용

- 안전, 경제 분야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과제를 발굴 및 건의
  - 시 뿐만 아니라 시민 접점에 있는 자치구 등도 과제 발굴하여 시민 체감도 제고
  - 중앙부처,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회의원 등을 통해 발굴된 안전 개선 요청

#### 〈 그간 추진 실적 〉

- 성과 : '12년 ~ '17년간 총 626건 과제 발굴·건의하여 130건(20.7%) 개선
- 개선사례 : ▲ 녹지지역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20%→30%),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관련 강제조항 신설

- 중앙정부·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의과제 개선율 제고
  - 정책협의체(행안부 및 시도 부단체장), 국무·차관회의 등을 활용하여 주요 안전 개선 촉구
  - 국회사무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시 건의과제 설명 및 집중 건의
-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 책자 제작,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언론 홍보 추진
  -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나 불수용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요청 책자 발간
  - 배포 대상을 정부·도서관 등에서 언론사까지 확대하여 기획기사 연재 추진
  - ※ 주요 건의 과제 50여건 선정하여 책자화, '13, '15, '16, '17년 발간

### □ 추진계획

- 중앙정부, 국회, 법제처 등 법령·제도 과제 건의 : 수시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개선 등 상반기 건의 과제 103건 부처 건의('18. 6월 말)
-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12~'17) 백서 제작 및 배포 : '18. 12월

### 3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 □ 운영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위원정원 : 50명 이내[현원 37명(내부위원 5, 외부위원 32)]
- 구 성 : 매회 8명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 회의개최 : 매월 2회(1, 3주 월요일 또는 2, 4주 월요일)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및 자치구청장의 처분

#### □ 추진실적

- 행정심판 청구건수 급증에 따른 제도 개선
    -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처리절차 및 서식 간소화 추진('16. 1.~)
- ※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
청구건수	1,298	1,715	1,627	1,614	845
재결건수	1,115	1,363	1,600	1,329	792

- 개발행위허가 등 고난도 사건 증가에 따른 주·부심 제도 확대 운영
  - 주·부심 지정 건수 : 353건('14)→338건('15)→390건('16)→388건('17)→222건('18. 6.)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30명 → 50명)에 따른 위원 증원 노력
  -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17. 2. 23.) 후 위원 20명 신규 위촉, 9명 재위촉
- 자치구 및 사업소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방안 추진
  - 재결 사례집 제작·배포('18. 5.), 행정심판 주요 인용사례 분석·통보('18. 7.)

#### □ 추진계획

-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신규 위촉 추진('18. 7.~)
- 주요 행정심판 인용사례 전파 및 재결 사례 업데이트(수시)

## 4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신속하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

### □ 추진방향

-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자발적·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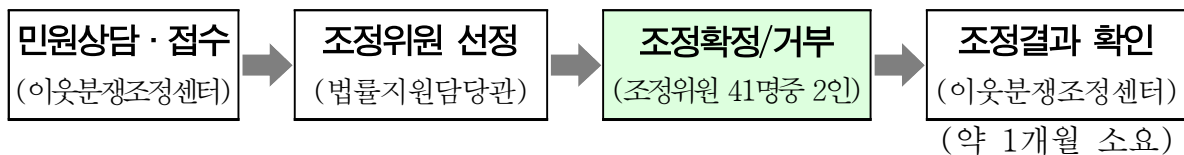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 언제나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동)에 마을변호사 813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지원
- 매월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예측 가능한 상담서비스 제공
  - 동별 1~4회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25개 자치구에서 매월 590회 상담
- 누구나 편리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월평균 1,300명 상담)

#### ②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이웃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완충장치
- 시민 접근 편의를 위해 서소문청사 1층에 상담실과 분쟁조정실 운영
  - 이용방법



#### ③ 서울시 공익법무사

- 등기 등 특화된 법률지원이 필요한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 전담 공익법무사를 1:1로 배치하여 법률 상담을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20개 시설에 51명 법무사 배치

## □ 추진계획

###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

- 시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반상회 자료,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시내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 등
  - 기타 시민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배포
- 마을변호사 인지도 및 자긍심 제고 지속 추진
  - 마을변호사 활동 미담사례, 법률상담 사례를 발굴하여 배포
  -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및 활동 우수변호사 표창
- 법률상담 중심에서 저소득층 법률구조(소송대리 등) 확대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중위소득 125% 이하 시민 법률구조 지원
  - 민사·가사 사건, 행정심판, 임금 및 퇴직금 관련사건, 양육권 사건 등

### ②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성 강화

- 건축물 누수, 소음, 동물분야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 확대
  -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 강화
  - 분쟁 조정시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법적 권리, 의무를 전제로 한 조정 실시
- 필요시 현장방문, 현장조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들이 분쟁현장을 방문하여 분쟁내용을 파악 합리적 조정지원
  - 동주민센터 등 분쟁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현장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서울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홍보, 분야별 사례를 소개하여 홍보

### ③ '공익법무사' 운영 내실화

- 창업지원센터, 50+센터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법무사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 등 5개 지회에서 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검토
-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속 운영

## 5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

법률전문가가 직접 소송 수행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소송관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함

### □ 운영개요

- 소송 수행현황 : 850건(행정 379, 민사 471) ('18.6월말 기준)

수행건수			판결확정				진행중
계	이월	신규	계	승소	패소	기타	
850	627	223	200	120	58	22	650

- 소송추진: 市 본청 및 사업소 소송(행정·민사 등) 통합수행
  - 개별부서 소송 직접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市 전체 소송을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통합수행

통합前(~'16. 8월)	통합後('16.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 본청·사업소 부서 개별 관리</li> <li>■ 판결(승소)시 소송비용 개별 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 전체소송 법률지원담당관 통합수행</li> <li>■ 판결(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회수 통합관리</li> </ul>

### □ 추진계획

#### ① 법률전문관(변호사) 직접 소송수행으로 전문성 강화

-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변호사 9명이 서면작성, 변론출석 등 직접 소송 수행

※ 서울시는 변호사 33명을 채용하여 도시재생분야, 민생사법, 감사·복지분야 등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법률자문, 법규해석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

- 법률전문관 소송 직접수행으로 외부대리인 선임비율 지속적 감소
  - 외부 법률고문 선임비율은 '14년 34%(214건)에서 '17년 21%(110건)로 지속 감소

#### ② 소송수행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전담부서의 소송통합 수행을 통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
- 판결(승소)시 소송비용액 회수 통합관리로 회수율 증가
  - 소송비용 회수율 통합前 70% 대비 통합관리後 83.2%로 회수율 13.2% 증가



###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②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

③ 투자·출연기관 설립 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

④ 노동이사제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

# 1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관리로 시정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 강화

##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 개 요

- 기 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통상 5회계연도 작성)
- 대 상: 일반회계, 특별회계(10개) 및 기금(16개)
- 내 용: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 및 규모 전망,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의무 및 재량지출 증가율, 투자계획 등
- 절 차: 계획안 작성 ⇨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 계획안 확정 ⇨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의회 의결(계획 확정)

○ '18년 ~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2017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	비중	증가율
계	345,988	1,777,816	338,670	344,194	355,858	364,930	374,164	355,826	100	2.5
일반회계	225,725	1,204,710	224,665	234,699	242,529	249,407	253,410	240,942	67.7	3.1
특별회계	94,094	473,670	93,476	90,328	93,290	95,800	100,776	94,734	26.6	1.9
기 금	26,169	99,436	20,529	19,167	20,039	19,723	19,978	20,150	5.7	△0.6

## □ 한정적인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예산 편성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 개 요

- 자원배분: 사회복지·도시안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 시민체감도가 높거나 예산투입 시 성과극대화 가능사업 적기 배정
- 예산편성: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재정적 실행력 담보를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요구부터 조정, 심의 및 고시 후 확정까지의 과정



– 예산편성 절차: 본예산 기준

~ 6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실·본부·국), 세입전망(기획조정실)
7월	: 예산편성 방향, 편성기준 통보(기획조정실 ⇨ 실·본부·국)
8월	: 예산안 요구서 작성 및 제출(실·본부·국 ⇨ 기획조정실)
9월 ~ 10월	: 예산안 조정(기획조정실), 예산안 확정(시장)
11월 1일	: 예산안 제출(시장 ⇨ 시의회)
11월 ~ 12월	: 예산안 심의 및 의결(시의회, 기한 : 12.16.), 예산 고시(시장)

○ '17년 ~ '18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		증 감	
		당초(B)	최종(C)	당초(A-B)	최종(A-C)
합 계	318,141	298,011	319,819	20,130	△1,678
일반회계	224,665	206,398	225,725	18,267	△1,060
특별회계(10개)	93,476	91,613	94,094	1,863	△618

## □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 예산집행: 시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예산액 한도에서 집행

- 집행관리: 시정 핵심사업 등의 공정과 예산집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이월·불용액 발생 최소화
- 집행절차: 집행계획 수립 및 요구(실·본부·국) ⇨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배정(기획조정실) ⇨ 사업추진 및 집행(실·본부·국)

○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 예산 변경: 제한적 운용

- 회계연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변경 최소화
-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존중을 위해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시의회 보고 의무화

## 2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추진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전 재정운영 강화

### □ 운영개요

- 개념 :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심사
- 근거 : 지방재정법(37조)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 대상

- (시 투자심사) 일반투자사업 시 40억원 이상, 자치구 60억원 이상(잔액 구비 사업 제외)
- (중앙투자심사) 일반투자사업 시 300억원 이상, 자치구 200억원 이상
- (재심사)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등

- 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자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결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 시기 : 정기 1차(3.22), 2차(5.31), 3차(7.26), 4차(9.20) / 수시

### □ 추진실적

- 2017년 : 총 166건, 사업비 39,447억원 규모
  - 적정 29, 조건부 추진 124, 재검토 13건
- 2018년 상반기 : 총 32건, 사업비 20,921억원 규모
  - 적정 4, 조건부 추진 25, 재검토 3, 부적정 1건

### □ 추진계획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투자심사 추진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제도의 내실화 도모

### 3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규 설립단계부터 적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단계에서 사회적 가치창출 등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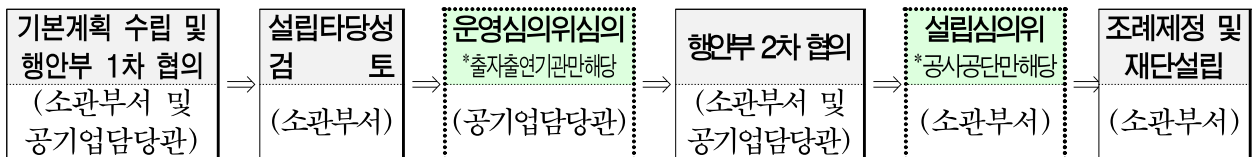
#### □ 운영현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현황 : 23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18)
- 대상업무 : 교통, 주택, 에너지, 문화, 의료, 장학 등 주민복지증진 사업

#### □ 설립지원

##### ○ 투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총괄검토 및 설립 지원

- 사업적정성, 설립타당성 등 사전검토, 행안부 설립협의, 매뉴얼 제공 등 운영지원



- 최근 3년간 기관추이 : 7개 신설(공사1, 재단6), 1개 통합(교통), 1개 전환(관광재단)

#### □ 경영평가

- 경영평가 : 매년 1회(4~8월) 실시 / 투자기관(행안부)·출연기관(서울시)
- 평가대상 : 20개 기관(투자 5, 출연 15) \*공공보건·120재단·기술연구원('19년부터)
- 평가내용 : 리더십, 경영성과, 재무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등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평가급 지급 및 경영개선 환류 등

#### □ 추진계획

- 시민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18.7.~9.) \*'18.9. 혁신보고회 개최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평가권(행안부) 지방이양 추진  
- (현행 경영평가권 이원화) 투자기관 - 행안부, 출연기관 - 지자체

## 4 노동이사제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노사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제시,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한국형 모델'로 전국 확산 도모

###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를 통하여 권리행사 및 주인의식 고취 필요
-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 증진 기여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6.9.29.공포·시행)
- 대상기관 : 정원 100명 이상기관 【300명 미만(1)/300명이상(2)】 \*100인 미만 이사회 의결로 가능
- 도입현황 : 16개 기관 22명 도입완료 (투자 5개/8명, 출연 11개/14명)

### □ 추진실적

- '16.10. 전국 확산 분위기 조성 조례제정 기념토론(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진행)
- '17. 7.~ '노동이사제 도입'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 중앙정부 제도 설계 지원
- '17.~'18. 노동이사·임직원 교육, 국외연수, 사례집 전국 배포 등
- '18. 7. 지방공기업 CEO 포럼시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 발표 등

### □ 추진계획

- 중앙정부 관련법 개정 관련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법제화 추진
  -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노동이사제 전국단위 토론회 개최('18.11.12. 예정)

-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모델' 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
  - 1단계('17년~'19년) : 제도안착 / 2단계('20년~'22년) : 성과분석 토대 노동이사 역할 확대

##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

---

②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

③ 서울형 우수 정책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강화

---

# 1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

비군사적·비정치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 사업목적 : 서울-평양 교류를 통한 남북 신뢰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정착
- 사업재원 :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액 201억원, '18.7월 기준 잔액 166억원)  
※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피해 지원('04.5월)을 계기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04.7월)

### □ 추진실적

- 기금 조성 후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등 직접 교류사업 추진
  -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지원, 북한수해 지원,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등
-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 이후 통일기반 조성 추진
  - 6·15 및 10·4 공동선언 기념 학술회의 지원, 시민대상 평화·통일 교육 등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교류협력 행사 협력 및 지원('18.2월)
  -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2.11),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2.12)

### □ 추진계획

- UN 및 미국 대북제재 현실 감안, 우선 추진 가능한 문화·체육 교류 추진
  - 경평축구, 제100회 전국체전 남북 공동개최, 서울-평양 교향악단 교류 등
  - 통일부 등 정부 공식채널을 통해 기 제안, 북측 대남기구와 시기·장소 등 협의 추진
- 문화·체육 등을 통한 교류 계기 마련 이후 경제·인프라 협력 순차 추진
  - 평양 산림녹화 지원,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상·하수도 개량 등
  - 인적·기술적 교류 및 현지조사 우선 실행, 제재 완화·해제 이후 본격 추진
-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확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 확보 : 8월~
  - 남북협력담당관(3팀, 남북협력정책팀·사회문화교류팀·경제협력지원팀) 신설(8.2)
  - 장기적·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추가 확보

## 2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
- 교류협력 중간지원조직 운영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추진방법

분 야	내 용
안전한 먹거리 확보	공공급식 등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농어촌 체험·교류	도농친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명소 발굴로 시민 방문확대
유희자원 발굴·활용	지역 유희자원 활용 및 교류 거점공간 확보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도시의 중장년층·청년 대상 도농일자리 마련
지속적 소통·협력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협약 자치단체간 소통 협력 강화

### 추진실적

- 우호교류협약 체결 : 총 50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38)
- 지역상생 교류협력사업 시행 : 5개 분야 21개 사업
  - 직거래 장터(15개소), 도농상생 공공급식(총6개 자치구)
  - 어린이 농촌유학체험(120명), 청소년 역사문화체험(2,700명)
  - 폐교 활용 캠핑장 조성(7개소), 지역출신 대학생 주거마련(14개 시·군 178실)
  - 체류형 귀농지원(5개소), 우포늪 내 서울숲 조성
  - 도시 중장년 일자리 교류(교육 6회), 귀농·귀촌 영농교육(4과정 900명)

###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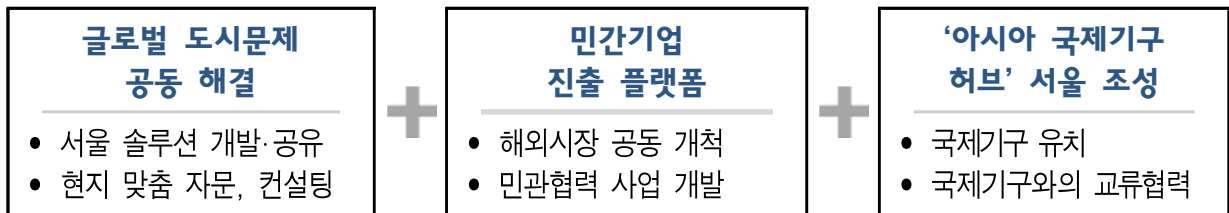
- 민선7기 지역상생 실천 기본계획 수립 : '18년 하반기
- 지역상생교류 복합 거점공간 조성·운영 : '18년 하반기

### 3 서울형 우수 정책 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강화

서울형 정책모델의 해외 진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 추진방향

-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 및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 추진실적

- 30개국 42개 도시 총 60개 우수 정책 해외 진출 성과 달성

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수도	소방	도시계획	기타
60건	27건	9건	9건	4건	3건	2건	6건

※ 지역별 : 아시아 37건, 아프리카 6건, 중남미 6건, 유럽 5건, 중동 3건, 오세아니아 3건

- 공신력 있는 국제평가 참여 및 수상으로 서울의 브랜드 제고
  - '18년 리관유세계도시상 수상, '17년 세계대중교통협회 혁신정책상 등
-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30개 유치로 글로벌 도시 환경 조성
  - 정부간 기구 16개, 준정부간 기구 7개, 국제 비영리 단체 7개 유치

#### □ 추진계획

- 유관기관, 민간기업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정책수출 성과 창출
-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기회 확대로 우수정책 진출사업 활성화 기여
- 국제기구 유치 기반 강화 및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